

우 의장, 야4당 만나 “정치개혁 논의서 여러 정당 의견 반영”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4개 야당을 만나 “정치 개혁의 핵심은 역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가치를 현실 정치에서 잘 구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혁 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뜻이 폭넓게 반영되고 또 정치가 책임 있게 작동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들 4당 대표들은 지난 3일 첫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 개혁을 위해 함께 행동하자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늘 제안해주시는 정치개혁 요구안도 그런 방향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논의가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어제(10일) 여야가 (국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교섭단체 논의 과정에서 여러 정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도 지난 9월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삼권분립, 일하는 국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목표로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치 개혁과 국회 개혁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단지 두 거대 정당의 요구 사항, 희망 사항만 관철된다면 정치 개혁이라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며 “(대선 전) 더불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면담에서 4당 대표와 공동요구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우 의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뉴스시스

“정치개혁 핵심, 헌법가치 현실서 구현하는 일” 4당 “정개특위 참여 제한적… 모든 당 참여해야”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합의했던 합의문에 기초한 논의가 이뤄질지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완전한 내란 정산을 위해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정치 개혁이 시급하다”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진짜 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원내 모든 정당이 정개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된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참여가 지나

치게 제한적”이라며 “원내에 있는 다양한 정당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또) 22대 국회에서도 (정치 개혁 과제) 공론 조사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정개특위가 정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 이 내란을 종식시키면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다시 국회와 정치권의 신뢰를 가졌던 국민들은 다시 정치를 멀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시스



김태완 광산구의원, 핵심 현안 속 광산구 역할 작심 질의 지속가능일자리특구, 구호 넘어 성과로 답해주길 송산근린공원 변화 미미… 관리 수준에 그쳐 ‘지적’ 시설관리공단 공정한 운영으로 행정 신뢰 회복해야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송산근린공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문제를 놓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광산구의 대표 사업인 지속가능일자리특구에 대해 “세계 최초 상향식 사회적 대화라는 구호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일자리 변화”라며 “3년여의 과정을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참여 실적과 투자 및 신규 고용 연계 등 실질적 민간 참여 수준, 기존 국가·광역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구조, 특구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3년간 예산·목표 인원 설정 기준과 핵심 성과지표도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 수 늘리기’가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적 성과와 책임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송산근린공원이 Y-프로젝트·활동강 에코랜드의 핵심 공간임에도 체감 변화가 미미하고, 광산구의 역할이 공원 관리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태·역사·문화·관광

을 결합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야간 경관 개선, 생태·문화 프로그램 도입 등 생활밀착형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 국·시비 공모와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민·상인·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송산섬 거버넌스와 전문가 자문 구조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도 강도 높게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환경적 퇴적금 분쟁, 내부평가급 논란,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입찰 문제를 두고 “이제는 공단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구정의 관리·감독 전반의 신뢰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퇴직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공단 설립 당시부터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적 내부평가급 운영 구조와 민간위탁 입찰 과정에서 자격 요건과 절차가 관련 법령과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하는지 등 형평성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과 관리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김준행 기자

이 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사의 수용… 현 정부 첫 장관 낙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며 “사의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전 장관은 먼저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전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중도 사퇴한 첫 번째 현직 장관이 됐다. 앞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낙마한 사례는 있었으나, 재임 중 장관이 물러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장관은 이날 전직 사의를 표명했다.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지만 이재명 정부와 해수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담당하게

전재수 “의혹 사실무근이지만 정부에 부담 안 돼” 정동영·이종석 “한 차례 만났지만 금품 수수 없어”

문제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특검 수사에서 서 여야 전·현직 의원 5명이 부적절한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재수 해수부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현금 4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통일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실명이 거론된 국무위원은 전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등이다. 정 장관

과 이 원장은 통일교 측과 한 차례 만났을 뿐 불법 수수는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정치권 파장과 여론 추이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통일교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별전담 수사팀을 꾸려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흔들



림 없이 국정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의혹의 사실 여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농수산물은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